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8500
----------	------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604호)	김형동의원	2024. 11. 14.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849호)	박해철의원	2024. 11. 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 2. 13.)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2회 국회(임
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의
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동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는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2조)
- 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절차 속행 규정 흠결을 보완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 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라.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의2)
- 마.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바.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함(부
칙 안 제1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를”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까지의”를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또는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경허가를”을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9조제2항”을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19호 중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17조 전단 중 “행정처분을”을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3호·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설></u>	아. 「 <u>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u>제25조제1항</u> 을 위반하는 행위	바. ----- ----- ----- ----- ----- <u>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를</u> -----

사. ~ 타. (생략)

<신설>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신설>

<신설>

4. ~ 8. (생략)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

사. ~ 타. (현행과 같음)

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4. ~ 8. (현행과 같음)

제12조(과징금) ① -----

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 라.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

---.

1. -----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제44조제13항

<p>나.·다. (생 략) <u><신 설></u></p> <p>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p> <p>4. (생 략)</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p> <p>가.·나. (생 략)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p>	<p>나.·다. (현행과 같음)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p> <p>3. ----- -----또는 제46조제2항----- ----- ----- ----- ----- ----- -----</p> <p>4. (현행과 같음)</p> <p>5. ----- -----변경 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25조 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p>
---	--

라. (생략)

<신설>

<신설>

② ~ ⑧ (생략)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2항-----

라. (현행과 같음)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자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
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
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
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
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
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
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
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
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
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
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9. -----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20. ~ 29. (생략)	20. ~ 29. (현행과 같음)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1. ~ 38. (생략)	31. ~ 38. (현행과 같음)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9. ----- -----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 45. (생략)	40. ~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 -----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 -----. ----- ----- -----.